

우리나라 環境問題와 環境政策課題

丁 赫 鎮

(環境處·中央環境紛爭調整委員會 事務局長)

◀ 目 次 ▶

- I. 머릿말
- II. 環境問題의 要因과 狀況
- III. 우리나라의 環境實狀
- IV. 環境政策의 基本方向
- V. 新經濟 5個年計劃과 大氣環境保全 政策方向
- VI. 新經濟 5個年計劃과 水質保全 政策方向
- VII. 新經濟 5個年計劃과 廢棄物管理 政策方向
- VIII. 新經濟計劃과 環境管理分野 政策方向
- IX. 環境保全과 企業의 役割
- X. 環境關聯 政府 支援政策

I. 머릿말

경제학적으로 볼때 環境汚染이란 환경을 汚染物 質排出이라는 특정용도에 과도하게 이용한 결과 이 환경의 다른 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현상 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환경이 다른 자원들과 구별 되는 중요한 특징은 환경을 제외한 다른 자원들은 가격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으나 환경은 그러한 제한이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타 자원이 경제

적 제약범위내에서 최대한 이용되는데 반하여 環境만큼은 경제적 부담없이 물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이용해 온 것도 사실이다.

6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성공요소들의 복합적 작용에 의한 결과이지만, 그 중에서도 값싸고 질 좋은 勞動力과 정부주도의 효율적인 經濟開發計劃은 특히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진행되어온 기업의 생산활동이나 시민들의 소비활동은 그 자체가 동시에 環境汚染行爲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부작용은 그 심각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최근 몇년전까지도 經濟成長의 이름하에 그다지 문제화되지 않았다. 과거의 環境汚染行態는 우리경제의 고속성장을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되어 왔고 오염물질의 배출량도 한두가지 물질을 제외한 대부분이 國民總生産(GNP) 등 경제성장 효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우리의 고도성장이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과 아낌답고 깨끗한 환경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고 생각할 때 70년대 이후 勞動問題와 經濟活動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듯이 環境問題역시 지금보다 훨씬 더 향후 경제활동에 강력한

갈등 요소가 될 것임이 틀림없다.

특히, 環境問題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 동향은 資源貧國으로 輸出主導型 産業構造를 지닌 우리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임이 틀림없는 바, '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UNCED)」를 계기로 환경문제에 의한 國際貿易規制와 環境技術의 도미노현상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내의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이슈(issue)는 이미 엄청난 環境行政需要를 증폭시켰는 바, 이는 環境問題의 본질상 정부만의 노력이 아닌 기업 및 민간 등 각 경제주체의 적정한 役割分擔과 상호 유기적인 協力關係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할 수 있으며 環境處의 정책추진방향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정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II. 環境問題의 要因과 狀況

産業革命이후 공업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大量生産과 大量消費를 기본으로 하는 資本主義 體制를 출범시켰다.

자본주의 체제는 대량의 原料를 소비하여 대량의 商品을 생산하였고 이를 대량으로 消費하는 과정의 연속으로, 이 과정에서 천연자원의 고갈,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大量發生을 가져왔다. 經濟的인 側面에서 보면 국민소득을 늘려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왔지만, 環境的인 側面에서 보면 환경자원의 고갈, 오염물질과 쓰레기의 양산으로 資源의 自淨能力을 약화시켜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앞으로, 지구의 자정능력 범위내에서 經濟成長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국제사회는 진

지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環境問題의 제기과정을 개관해 보면, 産業化 初期에는 주로 대기·수질오염과 생활쓰레기처리문제가 주된 관심사항이었으나, 제2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有害 廢棄物과 核廢棄物 安全處理問題가 관심을 끌었고 최근에는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등 地球環境問題가 국제사회의 초점이 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초기문제의 해결에 성공을 하고, 다음단계의 環境問題로 시책의 중점을 옮겨 가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 環境問題의 심각성에 눈뜨기 시작하였으나,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모든 환경문제가 한꺼번에 폭주,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피부로 느끼는 초기단계의 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며, 地球環境問題 등 최근의 문제에는 동향 파악과 대응요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하겠다.

III. 우리나라의 環境實狀

당면한 大氣, 水質, 廢棄物問題중 어느것 하나 만족치 못한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평가한다면 「맑은 물 공급」과 「쓰레기 위생처리문제」가 제일 심각한 실정이다. 自然環境, 環境科學技術開發 등 보다 근원적이며 본질적인 문제에는 접근 초기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大氣汚染의 경우, 난방시설, 산업시설 및 자동차의 급증 등이 主汚染源이며, 그동안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다. 自動車는 '92년 현재 450만대로, '80년의 8배이며, 이중 경유자동차의 점유비율은 37%나 되어 일본

13%, 미국 3%, 유럽 20%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오염가중요인이 되고 있다.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비율이 83.2%이며, 油類중에는 汚染物質排出량이 많은 B-C유가 33%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主要河川의 水質은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4대강 본류는 2-3급수 수준이고, 하천 및 지천,

소하천은 3-5급수 수준이다. 水質汚染의 發生量을 기준으로 볼 때는 生活下水가 58%로 제일 많고, 다음은 工場廢水가 41%, 그리고 畜産廢水가 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汚染負荷量을 기준으로 하면, 공장폐수가 44%, 생활하수가 40%, 그리고 축산폐수가 16%를 차지한다.

(표-1) 4대강의 上·下流 水質(BOD, ppm)

구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팔 당	노량진	안 동	물 금	대 청	부 여	담 양	나 주
'90	1.0	3.4	1.0	3.0	1.7	3.1	1.2	6.7
'91	1.1	3.9	1.1	4.0	1.6	3.0	1.1	5.6
'92	1.1	3.6	1.1	3.3	1.6	3.2	1.4	5.6

※ BOD 기준으로 1급수 : 1.0, 2급수 : 3.0, 3급수 : 6.0, 4급수 : 8.0, 5급수 : 10.0 이하임

쓰레기의 1인당 하루 발생량은 대만 1.0kg, 일본 1.1kg, 미국 1.8kg 인데 비하여 한국은 2.3kg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으면서도 減量化 및 再活用 등 원천적 대책이 미흡하고, 대부분 單純 埋立處理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1일 쓰레기발생량 84천톤의 처리현황을 보면 매립이 93%, 소각 1.8%, 재활용 4.6%, 그리고 미수거는 0.6%로 나타나 있다. 所得水準 增加에 따른 1회용품 선호, 製品壽命週期 短縮趨勢는 쓰레기발생량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汎國民運動으로 발전되고 있는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캠페인의 덕분으로 1회용 젓가락, 포장용기 등의 사용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의 쓰레기 재활용을 40-50%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1회용 쓰레기는 현재 전체 쓰레기발생량의 8%로서 1일 7,000여톤이 발생하고 있으

며, 이는 4.5톤 트럭으로 1,500대분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環境技術水準은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분야별로 보면 선진국의 기술을 100으로 볼때 大氣, 水質分野는 60-80% 수준, 廢棄物 燒却技術은 20-30%, CFC 代替物質 開發技術은 40-50% 수준에 불과하다. 大氣, 水質汚染의 汚染防止施設은 대부분 국내기술로 제작·설치되고 있으나, 전기집진기술, 정유공장의 탈황시설 설계기술 등 일부 核心技術은 일본, 미국 등으로 부터 기술료(로얄티)를 지급하고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92년까지 環境技術 導入件數는 총142건 213억원에 이르고 있다. 현재 1992-2001년 동안의 環境科學技術開發 綜合計劃을 수립·추진중이나, 총소요재원 8,155억원(공공 5,434; 민간 2,721)중 공공부문에서만 2,900억원 정도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IV. 環境政策의 基本方向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經濟·社會發展을 추구해 나가야 되며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는 製造業中心의 성장이 불가피하고 특히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石油化學工業 등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공업단지의 조성, 전기시설·항만·도로 등 社會間接資本 施設의 확충과 함께 都市人口 過密化 및 自動車の 급증이 예상된다. 아울러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大量消費와 함께 제품의 수명이 짧아지고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게 되어 현재보다 大氣와 水質汚染은 더욱 심화되고 폐기물 발생량 급증으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자체의 실시에 따라 住民所得増大를 앞세운 지역개발로 環境毀損의 증가도 예상된다. 이에 반해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여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한편, 선진국들은 엄격한 環境基準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産業生産體系를 구축하여 선진국보다 경쟁력 우위의 입장에서 環境問題를 貿易規制手段으로 활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와같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국내의 동향을 감안해 볼때 우리의 환경기준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하고, 이에 적합한 産業構造의 調整과 아울러 國民意識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과감한 환경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저항과 무역규제에 부딪쳐 지속적인 經濟成長에 제약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政策基本方向은 첫째로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일이다. 産業社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쾌적한 환경

에 대한 국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環境基準도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전반적인 産業體系가 환경에 적합한 체제로 전환토록 유도하여야 하며, 둘째로, 사전예방을 통한 環境汚染物質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이를 달성키 위하여 경제·사회적 전반적인 활동과 연계한 環境政策推進을 위하여 관계부처간의 事前協議體系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며, 기업은 低公害 技術開發로 상품생산 단계에서 부터 汚染物質의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국민각자는 環境保全實踐 運動을 생활화하는 등 정부, 기업, 가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汚染物質排出을 사전에 억제토록 하여야 한다.

세째로 발생된 汚染物質을 체계적·단계적으로 정화하는 일이다. 環境汚染의 회복에는 엄청난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큰 분야부터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정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네째로, 환경문제의 國際化時代에 능동대처키 위한 國際協力을 강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오존층 보호 등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各種 國際環境協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의 구축과 선진기술 및 정보교류를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다섯째로,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 및 지난 6월말 확정된 環境對策部門 新經濟 5個年計劃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일이다. 위에 언급한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국가의 성장과 산업의 발전수준에 맞는 환경개선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립한 5년단위의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92~'96)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난 6월말 확정된 新經濟 5個年計劃 環境改善

對策部門의 주요정책방향은 상술한 내용을 보완했거나 새로운 이슈를 일부 추가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로 환경적 요인을 감안한 에너지 및 개발정책 추진으로 環境汚染誘發 要因을 사전에 축소하고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하에 環境技術開發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개발된 기술은 산업현장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여 기술개발의 經濟的 效率性을 제고하며, 영세한 환경산업체의 적극적인 육성으로 급증하는 環境施設投資 需要에 적절히 대응한다. 둘째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環境基礎 施設을 대폭 확충해 나가되, 汚染原因者 負擔原則의 운용강화를 통하여 사회 각 부문의 오염 유발요인이 사전에 감축되도록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대한 민간부문의 자율적 참여가 확대되도록 市場 및 價格機能을 활용하고, 환경관련 제규제 및 기준을 개선한다. 셋째로, 地方環境 行政推進體系를 재정비하여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또한 “新經濟 5個年計劃”에 명시되지 않은 環境投資事業 및 施策事業은 기존의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따라 계속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V. 新經濟 5個年計劃(1993-1997)과 大氣環境保全 政策方向

기본적으로 大氣汚染問題는 도시라는 한정된 공간에 환경용량이상으로 배출되는 有害가스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環境容量은 각 도시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예컨대 공기가 잘 확산되는 해안도시나 평야도시와 분지형 도시와는 큰 차이가 있고, 또 완충능지가 많은 도시와 고층빌딩만

들어찬 도시와는 汚染物質의 吸收能力面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는 도시공간에서 배출되는 有害가스排出量을 근원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政策手段을 강화하고 있다. 첫째로 청정연료(LNG) 및 저공해연료(경유 등) 사용의무화지역 및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NG 및 경유 수급사정을 감안하여 1단계로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의무화대상 아파트 및 빌딩범위를 확대해 나가고('94부터 추진), 2단계로는 부산·대구지역의 아파트를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미 의무화 대상으로 되어 있는 빌딩은 그 대상범위를 확대키로 하였다. 3단계로는 대전·광주·울산시를 의무화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둘째로, 저황유의 황함유기준을 강화하고 사용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황 B-C유(1.0%)의 공급·사용지역을 현행 20개 시·군에서 '96년까지 38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燃料用 輕油의 황함유기준을 '96년까지는 현행 0.2%에서 0.1%로 강화한다.

셋째로, 석탄·석유 등 化石燃料의 사용비중을 '97년까지는 현수준이하로 억제할 계획이다. 계획기간중 化石燃料의 受給計劃이 조정되고 消費節約 施策이 강화될 예정인데, '93~'97 기간중 오염유발이 큰 무연탄·신탄 사용비중을 연평균 10% 수준 감축하고, 청정연료인 천연가스 사용량은 연평균 17%수준 증대해 나간다.

넷째로, 에너지가격 구조조정시 環境汚染 誘發程度에 기초하여 環境費用을 단계적으로 내재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에너지가격 결정시 대기오염이라는 환경비용적 측면의 고려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에너지 가격이 외국

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

〈표-2〉 에너지간 汚染物質 排出量 相對比較(g/10kcal)

종류	아황산가스	CO	먼지
LNG	0.01	0.31	0.08
	(1)	(1)	(1)
경유	7.4	0.69	0.34
	(740)	(2)	(4)

〈표-3〉 油種間 相對價格 比較(원/ℓ, '93.2월 기준)

종류	한국	일본	대만
B-C유	90	139	100
경유	210	472	366
휘발유	610	915	497

따라서, 배연탈황시설 투자비를 석유·전력 등의 生産原價에 반영하는 등 에너지 가격구조에 環境費用을 내재화해 나가고, 石油製品價格 構造調整時 環境적 요인을 감안하여 추진함으로써, B-C유, 경유 등 環境汚染物質 過多排出燃料의 합리적 사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로, 지역별 청정연료사용 의무화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청정연료사용 의무화지역내의 발전시설 및 지역난방 등 대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하여 청정연료의 低公害燃料의 선택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대규모 연료사용자의 부담을 일부 완화한다.

신경제 5개년계획(1993~1997) 대기오염방지대책에서 또한가지 유의할 점은 環境容量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大氣汚染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은 오염발생원에서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대책들은 大氣汚染의 근원인 에너지사용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시키고 또 에너지 소비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들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유효한 경우에도 汚染物質은 불가피하게 발생됨으로 발생된 오염물질의 저감대책 또한 중요하다. 발생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대책으로는 각 공장에서 大氣汚染 防止施設을 설치하여 일차적으로 저감시키고, 그리고 최후로 대기중에 방출된 오염물질은 綠地空間을 설치하여 인간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有害性を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

첫째로, 環境保全林의 조성을 통해 당해 도시지역의 大氣汚染 淨化能力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94년에 環境보전림 조성을 위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標準環境保全林 造成事業을 실시하고, 이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년차별로 여타 도시지역에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로, 도시지역 주변에 공단조성 등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주거지역 등 주변지역의 環境영향을 최소화하도록 環境影響評價制度 등을 활용하여 차단녹지 등 일정규모의 녹지공간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로, 大氣汚染防止施設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하여 環境汚染防止基金의 확대조성 및 金融支援資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금융지원외에도 세제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環境管理工團에 環境기술전문가로 구성된 環境技術支援團을 설치하여 기술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VI. 新經濟 5個年計劃(1993-1997)과

水質保全 政策方向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는 기존의 맑은 물 공급대책을 기본틀로 채택하였다. 특별시 및 직할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기존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추진하되 부산 장림 및 대전하수처리장의 증설과 해운대, 광주 송대의 下水處理場 建設事業은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신규로 추가되었다.

일반도시 하수종말처리장은 기존 중기계획상의 대상사업 모두를 신경제 계획기간중 착공하되, 財源調達規模를 감안하여 사업완공기간을 계획기간 후까지 연장기로 하였다. 다만, 內陸都市는 가능한 '96년도까지 완공하고, 海岸都市는 '97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조정하였다. 신경제 계획기간중 완공되는 사업지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지 역 명
미착공 도시중 사업비 200억이상 도시	수원(중), 시흥, 오산, 광주
해안도시	안산, 강릉, 속초, 삼척, 동해, 대천, 서산, 군산, 여수/여천, 순천, 삼천포, 진해, 제주(중), 서귀포(중)
내륙도시중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역	굴포천, 김해

읍급 하수종말처리장은 대권역 수계관리계획대로 '95-'97 기간중 178개의 소도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國家工團에 건설될 하수처리장은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그리고 新都市에 건설될 下水處理場은 원인자 부담사

업으로 각각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畜産廢水處理場은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중기계획보다 53개소를 더 추가하여 총 85개소를 주요 하천 및 상수원주변에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따라 투자소요도 중기계획상의 1,408억원에서 3,726억원으로 늘어났다. 糞尿處理場은 신경제 계획상 86개소, 1,877억원을 투자기로 하여 중기계획상의 79개소, 1,854억원과 큰 변동이 없으나 農工團地 廢水處理場의 경우 중기계획상 53개소 217억원에서, 128개소 594억원으로 늘어났다.

VII. 新經濟 5個年計劃(1993-1997)과

廢棄物管理 政策方向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는 燒却施設의 설치보다는 위생매립지 설치 우선정책으로 전환기로 하였다. 전국적으로 총 675개소의 一般廢棄物埋立地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중 64%가 1,000명이하의 소규모로 향후 약 3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입지선정이 용이한 埋立施設 設置가 보다 우선 순위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광역매립지 우선정책에서 광역과 단독매립지를 병행 추진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 이는, 지역주민의 넘비현상으로 광역매립지 설치 추진이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고, 자기고장 쓰레기는 자체 처리토록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는 각종 廢棄物의 再活用率을 제고하고, 分離收去制度의 정착 및 再活用品收去體系를 완비하는 사업과 자원절약을 위한 再活用市場의 확대사업이 추진된다.

一般廢棄物處理에 대한 신경제계획 기본방향은

처리대상 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再活用事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광역매립장 조성이 곤란한 143개 시·군에 대하여는 單獨衛生埋立地를 조성하여 읍·면단위 소규모 비위생 매립시설 난립을 억제하며, 廣域埋立施設의 설치가 불가피한 31개 시·군에 대하여는 광역매립장 14개(3,013㎡)건설을 추진한다. 특히, 가연성쓰레기는 소각을 원칙으로 하여 현재의 소각율 1.6%를 '97년에는 16.1%로 제고할 계획으로 계획기간중 42개 지역에 11,500톤/일 처리용량의 燒却處理場이 설치될 것이다.

特定廢棄物處理에 대한 신경계계획 기본방향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을 설치하고 特定廢棄物 公共處理率을 '97년까지 29%로 제고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91	'97
• 발생량(천톤)	1,678	2,863
• 권역수	2개	6개
• 처리시설용량		
중간처리시설(천톤/년)	44	246
매립시설(천평)	19	291

재활용촉진에 대한 신경계계획 기본방향은 아래와 같은 再活用率 提高를 위한 목표설정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상황적인 제약여건 때문에 점진적인 改善戰略을 채택하고 있다.

	'91	'97
• 생활쓰레기 재활용율(%)	8	20
• 산업폐기물 재활용율(%)	55	60
• 특정폐기물 재활용율(%)	51	60

VIII. 新經濟計劃과 環境管理分野 政策 方向

생태계가 보전되는 自然環境을 조성하기 위하여, 自然環境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自然環境保全法의 제정에 따라 自然環境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國土利用計劃과 自然環境保全을 상호 연계시키고, 보전을 요하는 自然環境보전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한편, 自然生態系 保護施設擴充 등 自然環境 관리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아울러 시가지 개발시에는 인구대비 적정 수준의 休息綠地空間 造成을 의무화하고 工業團地 등에 대해서도 녹지공간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環境科學技術進興을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측정기술개발에 관한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인공위성에 의한 원격탐사 등 첨단 환경 기술개발을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 KIST,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產·學·研 合同研究體系를 구축하는 등, 環境産業을 2000년대의 수출유망 산업종목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환경마크제도를 조기 도입함으로써 低公害 技術開發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中·長期的 環境科學技術開發綜合計劃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해 나갈 것과 아울러 尖端環境科學技術開發 및 관련 기업조정업무를 전담하는 종합과학적인 專門研究機關으로서의 環境技術開發院을 설립할 계획이다.

환경관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관련부처의 정책 및 사업이 環境政策과 연계하여 추진되

도록 사전협의 등 環境性 檢討를 강화하고, 제반 개발사업의 環境영향평가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평가협의사항의 이행확보를 위한 事後管理基準을 강화함과 아울러, 環境寄與度 評價制度를 도입하여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및 시책 사업이 環境에 미치는 정도를 객관적 척도를 가지고 計量化함으로써 環境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地方化時代 進入 및 環境政策開發 需要急增에 맞추어 環境처, 지방환경청, 시·도, 국립환경연구원 등 기존의 環境行政 推進體系를 개선하고, 原因者負擔 原則을 확대적용하여 環境개선을 위한 소요재원 마련 및 국민들의 環境보전의식을 고취 시킴과 동시에 稅制·金融支援 擴大 등으로 중소기업의 汚染防止施設 投資를 촉진해 나가며, 環境 개선이 주민의 소득 및 생활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環境示範都市 造成事業을 추진하고, 地球環境補填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면서 각종 국제환경규체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IX. 環境保全과 企業의 役割

최근 국내 각 기업들이 생활활동과는 별도로 1사1산가꾸기운동 등 環境關聯 公益事業을 펼쳐거나, 環境보호실천활동강령 채택, 저공해제품개발, 공해방지시설 투자확대 등 環境保全運動을 기업경영이념에 포함시키는 「그린마케팅」 활동을 통해 기업이미지를 높이고 있음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 같다. 또한 環境·公害問題를 기업도약의 호재로 삼고, 나름대로 環境산업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기업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적으로 '91년도의 경우 우리나라 環境市場의 규모는 民間部門 6,000억원, 公共部門 5,500억원으로서 총 1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앞으로도 環境市場은 環境기준의 강화, 環境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볼 때 국내 環境시장의 규모는 '96년도에는 3조원, 2,001년도에는 5조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우기 '91년 이후 美·蘇 兩國의 대립체제가 무너지면서 주요 선진국은 첨단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주요 핵심기술 14개 분야에 대한 2001년까지의 개발계획(G-7 프로젝트로 통칭)을 마련, '92년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이 계획에 環境技術開發計劃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環境기술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2001년까지 총 2,625억원을 투자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 CFC 대체물질 등 地球環境保全技術을 집중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이 앞으로의 環境産業은 環境시장규모의 확대와 함께 그 전망이 아주 밝으며, 環境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環境산업, 環境기술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제 기업도 環境문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국내의 시장에서 앞서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X. 環境關聯 政府 支援政策

1. 必要性

이념대립이 해소된 현재 전세계는 經濟力의 차이에 의한 南北問題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기

업역할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반면, 기업은 環境資源을 가장 많이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고갈, 環境汚染被害라는 전지구적 차원의 環境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하고 있다. 앞으로 전세계는 環境자원을 어떻게 이용하고, 필연적으로 배출될 수 밖에 없는 環境汚染物質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라는 “지속 가능하고 環境적으로 건전한 개발”(sustainable and environmentally sound development)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環境規制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예컨데 지금까지는 排出規制 中心의 事後規制制度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앞으로는 원료의 문제에서부터 폐기물의 재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산업 과정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가 예상된다.

또한 原因者負擔原則에 따라 기업의 環境負擔은 점차 가중되고, 따라서 점차 가중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環境에 대한 投資促進을 유도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한 環境費用의 價格內在化를 도모함에 따른 정부의 촉진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2. 稅制支援制度(Tax Incentives)

公害防止施設 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또는 特別償却制度는 아래와 같다.

〈稅額控除 또는 損金算入〉

-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3/100(국산기자재 사용시는 10/100)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
 -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30/100(국산기자재 사용시는 50/100) 금액을 손금에 산입
- 〈特別償却〉
- 자산취득가액의 90/100 금액을 감가상각으로

인정

〈支援對象〉

- 대기·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상의 방지시설 및 폐기물처리 시설은 세액공제 또는 특별상각중 택일
 - 비산먼지 억제시설, 방음·방제시설, 탈황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오수정화시설은 세액공제 대상
- 방지기기 및 폐기물 처리기기 수입시 關稅 減免制度는 아래와 같다.
- 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가 수입하는 것으로서 국내 제작이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액의 80/100을 경감
 - 폐수 또는 폐유처리시설중 기계·기구 등 55종
 -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용 기계·기구 등 33종
- 기부금, 부담금에 대한 必要經費 또는 損費 認定制度 및 폐기물재활용 촉진을 위한 附加價値稅 買入稅額 控除制度를 아래와 같이 도입하고 있다.
- 합성수지 폐기물처리비용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 부담금 납부액의 필요경비 또는 손비 인정
 -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 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환경기술개발원 등에 지원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등은 필요경비 또는 손비 인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구입할 경우 그 구입가격의 10/110 금액을 납부할 부가세에서 공제
 - 고물영업 허가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자, 한국자원재생공사 등 環境産業을 중소기업으로 분류,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租稅特例 등 支援制度는 아래와 같다.

- '92년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개정, 환경산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규정
 - 폐기물처리업은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 환경측정관련업은 50인 이하, 폐수처리업은 100인 이하가 해당
- 이 경우 중소기업이 받는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투자세액공제, 창업시 특례 등(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조세특례 혜택을 받음
- '94년 초까지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산업 분류표를 전면 개정할 계획

3. 金融支援制度(Loans)

1987년 설치된 環境汚染防止基金에서 지원하는 금융지원자금이 금융지원제도의 효시를 이루고 있다. 이 지원제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중소기업의 공해방지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3년 거치 7년상환, 연리 7%의 장기저리 자금지원('93년 308억원 규모)
 - 1개 업체당 2억원 한도, 공동방지시설은 5억원 한도 지원
- 환경개선부담금의 납입에 따라 환경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자금 등에도 확대지원('93년 60억원 규모)
- 이의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건설시 입주업체 부담금 전액을 3년거치 10년 상환의 장기로 지원

그러나, 長期低利資金인 環境汚染防止基金의 조성규모 미약으로 중소기업은행 및 산업은행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방지기금 규모로는 매년 투자되는 防止施設 總投資額의 10%에도 못미치고, 또한 조성규모가 적어 소요기간이 3~4개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93년도에는 산은자금 800억원, 기은자금 300억원을 “공해방지시설 투자지원자금”으로 별도 확보하여 지원하였고, 앞으로는 環境積金 또는 環境保險制度 등을 개발하여 모든 金融機關까지 확산(중소기업은행은 '93. 6월부터 녹색투자신탁예금 취급)시킬 계획이다. 더 나아가, 에코산업, 환경산업 육성 등에서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4. 技術支援

'93년 3월부터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環境施設에 대한 기술진단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혜택은 1일 폐수배출량이 500톤 이하이거나 고체연료 사용량이 연간 200톤 이하의 중소기업만이 받을 수 있다. '92년 점검결과 총 11, 082개 업체가 방류수 기준초과 등 관계규정 위반 사실이 발견되어 技術支援의 必要性이 증대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일선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環境基礎施設에 대한 專門技術 診斷도 실시한다. '92년도에는 環境技術監理團의 인력을 일부 활용하여 배출업소 195개소, 환경기초시설 35개소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하였고, '93년도 환경기술 지원계획으로는, 첫째로 배출업소 215개, 환경기초시설 101개, 총 316개 시설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고, 기술지원인력은 환경기술감리단 인력 10명중에서 4명을 전담토록 조치할 것이다. 참고로, '94년부터는 환경기술감리단을 폐지하고, 환경관리공단내 『환경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